

제 12회 아산 도시락 시리즈

<북한정권의 붕괴: 군사대응 및 사후과제>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2011년 11월 30일 (수) / 10:30AM-12:00PM

아산정책연구원

강연 요약본

아산정책연구원은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 교수를 초청하여 제 12회 아산 도시락 시리즈 (Asan Dosirak Series)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붕괴: 군사대응 및 사후과제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를 주제로 진행한 본 강연에서, 린드 교수는 북한정권의 붕괴시 필요한 병력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린드 교수는 북한정권이 붕괴된 후, 핵무기 통제력 상실(loose nukes), 인도적 문제, 탈북자 유출 문제, 내전 등의 위험한 안보 상황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군사임무가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군사임무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위치 파악 및 확보, 현대전에서 부각되고 있는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 국경 통제, 재래식 무기의 감축, 전투 작전 및 전쟁 억제 작전 등이 있습니다. 붕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군사작전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린드 교수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군사작전의 규모와 수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린드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군사임무에 필요한 군사작전의 규모를 차례로 설명하면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안정화 작전을 위하여 평균 인구 1000명당 13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본 작전을 위하여 총 31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덧붙여, 북한을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안정화 작전을 펼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다발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경우,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감안하여 남포와 청진에서 함께 작전을 펼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사임무인 대량살상무기의 위치 파악 및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가 위치한 지역을 급습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고, 이를 약 50여 지역이라 예상한 후, 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경 통제, 재래식 무기의 감축, 전투 작전 및 전쟁 억제 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합치면, 총 26만에서 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기 전, 린드 교수는 군사작전을 펼치는 병력에서 한국군이 차지하는 정도, 유엔안보이 사회의 역할, 그리고 통일을 위한 장기적 숙제 등이 북한정권의 붕괴 직후 군사작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 강연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 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정권의 붕괴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에서의 내전 등의 이유로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경우, 필요한 병력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린드 교수는 군사작전의 규모와 수준을 감안할 때, 주변국들의 협력, 특히 독자적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중국,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합동 위기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며 본 강연을 마쳤습니다.